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년 국정감사

한농연 정책 요구사항

2020. 9. 25.



사단
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년 국정감사 한농연 정책 요구사항

- 1** 역차별 받는 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확보
- 2**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선
- 3** 농업인 노동 안전을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안전재해보장보험 도입
- 4** 농업용수의 안정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독자적 물관리 체계 구축
- 5** 농촌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시행
- 6** 생산자·취약계층을 고려한 국가 푸드플랜계획 수립·시행
- 7** 공익자원 훼손하는 농지산지 태양광 사업의 전면 재검토
- 8** 포스트코로나, 기후변화 대비 농업분야 대응방안 정립·마련
- 9** 과수산업 유지·보호를 위한 과수화상병 방역대책 개선
- 10**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정비·강화 및 예산 증대

1) 역차별 받는 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확보

한농연 요구사항

-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최소 국가 전체 인구대비 농업인구 수를 감안하여 확대해야 함
 - 코로나19에 따른 향후 농업분야 생산성 유지 및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 및 농산물 온라인 구축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노후 수리시설 정비 및 재해관련 복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함

제안 배경

- 정부의 농업예산 확대는 갈수록 심각해지며 국정 운영 방향에 농업이 안중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원인 반면, 농식품부 본부 예산은 16조 1,324억원(2.3% ↑)에 불과한 실정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
 - 실제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규모는 17년(3.6%), 18년(3.4%), 19년(3.1%), 20년(3.1%)로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3% 벽을 지켜내지 못 했음
 - 특히 기획재정부의 2020년~24년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재정지출은 5.7% 늘어나는 데 반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2.3%에 불과해 당분간 농업 확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 생산성 유지를 통한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청년농 육성, 우량농지 확보, 주요 식량 작물 공공비축 등 각종 정책 지원이 필요하나 '20년 농업예산 및 국가재정운용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 2020~2024년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

(단위 : 조원,%)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 증가율
총 지출 (증가율)	512.3 (9.1)	555.8 (8.5)	589.1 (6.0)	615.7 (4.5)	640.3 (4.0)	(5.7)
1. 보건·복지·고용	180.5 (12.1)	199.9 (10.7)	217.4 (8.8)	230.2 (5.9)	242.7 (5.4)	(7.7)
2. 교육	72.6 (2.8)	71.0 (△2.2)	74.2 (4.4)	75.4 (1.6)	77.9 (3.4)	(1.8)
3. 문화·체육·관광	8.0 (10.6)	8.4 (5.1)	8.8 (4.7)	9.2 (4.0)	9.4 (3.0)	(4.2)
4. 환경	9.0 (21.8)	10.5 (16.7)	11.4 (8.3)	12.1 (6.1)	12.6 (4.0)	(8.7)
5. R&D	24.2 (18.0)	27.2 (12.3)	29.1 (6.9)	30.7 (5.4)	32.0 (4.3)	(7.2)
6. 산업·중소·에너지	23.7 (26.4)	29.1 (22.9)	32.3 (10.9)	34.2 (5.8)	35.6 (4.0)	(10.7)
7. SOC	23.2 (17.6)	26.0 (11.9)	27.8 (6.8)	28.7 (3.4)	29.3 (2.0)	(6.0)
8. 농림·수산·식품	21.5 (7.4)	22.4 (4.0)	23.0 (2.7)	23.3 (1.3)	23.5 (1.1)	(2.3)
9. 국방	50.2 (7.4)	52.9 (5.5)	56.1 (6.0)	58.6 (4.5)	60.9 (4.0)	(5.0)
10. 외교·통일	5.5 (8.8)	5.7 (4.3)	6.0 (4.0)	6.2 (4.0)	6.5 (3.9)	(4.1)
11. 공공질서·안전	20.8 (3.5)	21.8 (4.4)	22.8 (4.8)	23.7 (4.1)	24.6 (3.4)	(4.2)
12. 일반·지방행정	79.0 (3.2)	86.5 (9.5)	87.6 (1.3)	92.0 (5.0)	94.9 (3.2)	(4.7)

자료 : 기획재정부

2)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선

한농연 요구사항

-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전체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대성 품목 확대, 가입 기준 완화 등 가입률 확대 방향 마련
 - 보상 수준, 보험료 할증 등 본문에서 제시한 주요 지적사항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강화

제안 배경

- 우리나라는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실제 연평균('09~18) 인명피해(사망·실종)는 19명, 재산피해는 3,682억원('18년도 환산 가격 기준)에 달함
 - '20년의 경우 연 초 이상저온으로 인한 언피해를 시작으로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으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음

〈2020년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 현황〉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비고
이상저온 (4월)	13개 시·도 과수 개화기, 노지식물 정식기 저온 피해	■ 농작물 43,554ha	
마늘인편 이차분화 (5월)	겨울철 고온의 영향으로 전남지역 남도종 마늘의 인편 2차분화(벌마늘) 피해	■ 마늘 664ha	
우 박 (5~6월)	5.29일 경북, 6.6일 전북·전남·경남 내륙·산간 지역 사과, 고추 등 피해	■ 농작물 1,273ha	
집중호우 (7~8월)	7.12~8.11일까지 내린 비로 11개 시·도 벼·논콩·과수·밭작물·채소 등 침수·낙과 피해	■ 농작물 39,907ha	누적피해(잠정)
태 풍 (8~10호)	제8~10호 태풍으로 전국에 낙과·도복·침수 피해	■ 농작물 34,254ha	누적피해(잠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이처럼 자연재난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지속해서 증가하며 매년 농작물 피해가 상시화됨에 따라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 그러나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이러한 손실을 제대로 보전해 주지 못 한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주요 지적 사항〉

구분	내용
과수 특약사항	○ 과수 5개 품목(사과·배·감귤·곶감·단감)은 태풍, 강풍, 우박 등 특정 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 과수류는 태풍, 강풍 등에 의한 낙과와 우박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가 가장 큰 손실임에도 이를 특약사항으로 지정한 것은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
보상수준 조정	○ 사과·배·단감·곶감 4개 품목의 경우 열매숙기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 정부는 농가가 과도한 열매숙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과수목의 수세나 다음연도 꽃눈 형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
미보상 감수량	○ 피해율 산정 시 자연재해 외에 농가 부주의(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요인 반영. 그러나 각종 영농활동 부재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의 인과관계 등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보험료 할증제	○ 보험요율 시·군별로 적용하다 보니 동일한 품목이라도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보험료 편차 발생. 특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도 할증이 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무사고 환급제	○ 보험금 수령 시 보험료 할증, 자기부담률 증가 등 농가에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으나 농작물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농가 혜택 부재. 이 때문에 가입률 제고 및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16년 한 해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벼 무사고 보험료 환급제도(보험료 70% 가량)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
손해평가 조사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조사는 보통 현지 평가인과 손해평가인이 담당하나, 평가인마다 기준이 달라 객관성이 부족함. 또한, 피해조사 신청 후 바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
중복수령 불가	○ 보험 가입 농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복구비(농약대, 대파대) 중 대파를 지급받지 못 함.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에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이 포함된다고는 하나 농가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고 가입하는 제도로 재난지원금과 엄연히 성격이 다른데 중복 수령이 안 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

- 아울러 가입 대상 품목이 한정('20년 5개 시험 작물을 비롯해 총 67개 품목)돼 있는 데다 해당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만 가입할 수 있어 혜택이 제한됨으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농업인 노동 안전을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안전재해 보장보험 도입

한농연 요구사항

- 의무가입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 방식의 안전재해보장보험 도입·실시
 - “안전재해보장보험”은 모든 농업인과 농업노동자들이 의무가입토록 함
 - 위험성이 높은 농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 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함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위해 농업인 손상 및 특수질병(농부병, 장기적 농약 손상)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보험 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함

제안 배경

- 현행의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아닌 임의가입의 민간 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초 정책 취지가 훼손되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지급 거절
 -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농업인 경운기 전복사고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 미지급 사건은 농업인안전보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사고 이후 40여일 뒤 사망, 사고 당시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사망한 날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사망보험금 미지급

- 농업인안전보험 약관 제9조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의거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
- 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거 유사한 법적 공방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사건의 인과관계 상 사고원인이 보험가입기간 중 농작업 중에 있었다면 보험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게 농작업 중 장기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1년의 임의가입기간에 사고와 사망건이 함께 발생해야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 사업자의 논리가 과연 정책보험사업에 부합한 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애초 협동조합 보험 형식의 농업인안전공제도 아니고,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따라 금융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농협생명이 공적보험을 독점하고 있으며, 보호해야 할 “농업인”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정책보험 소관부처의 방관적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인 보험사업자가 분쟁 기구를 설치·운영하기 때문에 중립성 보장이 어렵고, 분쟁 발생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분쟁해결기구 설치·운영’ 조항을 2020 사업시행지침에서 삭제하였음
- 농업인 개인에게 금감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라고 할 거면 사업주관 기관인 농식품부나 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왜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듦
- 또한 “사망보험금 연장특약”으로 보험 종료 후 30일까지는 사망시 유족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약관 개정을 추진했으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기간을 30일로 특정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큼

- 가입률 부진과 다양한 사각지대 발생

- 정책보험임에도(정부 및 지자체지원 70~80%) 가입률은 65%수준, △노인가입률은 증가, 청년 가입률은 감소, △저소득층 및 영세농 보험가입 배제, △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도 필요성을 느낀 농업인안전보장제도, 농업인 안전의 근본 대책은 사회보험 수준의 농업인안전보장제도를 통해 실현해야 함

- 농업은 전 산업을 통틀어 산재율이 가장 높음(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1.5배~2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기준에 따라 전체 농업인의 95%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산재보험법상 자영농도 중·소 사업주로 전제하고 산재보험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임의가입이라는 한계로 극소수만이 가입하고 현실임.
- 이제는 농업인 안전의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사회보험 수준의 농업인안전보장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함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 7가지 농어업공약>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의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 산재보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업·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 이제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 농업재해보험의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 산재보험을 시행하겠습니다.

○ 농업재해보험의 지원 확대

- 보험료 농가부담 높고 대상품목 제한적이며 원상복구를 위한 농가부담이 높은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 강화

○ 농·어업산재보험 시행

- 기존 농업인 안전보험 등을 보강하여 종사자 의무가입, 산업재해 수준의 사회보험 혜택 보장

4) 농업용수의 인정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독자적 물관리 체계 구축

한농연 요구사항

- 농업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농업용수 관리·감독 체계 구축·유지
 - 지역·품목별 농업용수 수요·공급 관련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 농업용수 확보·공급 계획 수립
 - 이를 바탕으로 농업용수 유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 수리시설의 대대적 정비 추진

제안 배경

- 범정부 차원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도 농업용수 관리·감독 주체가 개편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지난해 6월 수량·수질 등을 물관리 업무 전반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관리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 농업용수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나 물관리 최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농업용수 이용·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농업용수는 농작물 생육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부족 또는 공급 지체 시 농업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함
 - 이런 상황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농업 분야가 포함될 시 각종 물 관련 분쟁에서 밀려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 감염병 확산 및 기후·환경 변화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자칫 식량자급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홍수·태풍 등 자연재난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저수지, 배수로 등 농업용 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열악해 피해가 컸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13년 '배수개선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30년까지 30만2700ha에 대한 배수개선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19년말 기준 실제 정비가 이루어진 구간은 18만 9800ha(62.7%)에 불과. 이런 상황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 추진 시 추진체계 변경 및 전문성 결여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될 수 있음
- 따라서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서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5) 농촌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시행

한농연 요구사항

- 농촌 지역 난개발 규제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부처간 협력 프로세스 구축
 - 현재 농촌은 농림축산식품부, 어촌은 해양수산부, 산촌은 산림청에서 전담하며 처리범위가 제한적이기에 농촌 공간 정책에 대한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단 공간계획 수립 및 진행에 있어 일방적 관주도가 아닌 농촌 현장과의 상호 소통으로 진행 되어야 함
- 농촌 지역의 난개발 규제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제안 배경

- 농촌 지역은 최근 공장 및 신재생에너지 등 난개발이 심화되어 자연경관은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실제 지난 2001년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주민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하였음
 - 아울러 2019년 9월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또한 공장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공장 혼재로 건강피해가 발생하여 환경부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한바 있음
- 농촌 지역의 난개발 및 농업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 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에서는 ‘환경·경관’ 부분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세부 항목 모두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낮았으며, ‘적은 환경오염’의 도·농간의 만족도 점수 차이의 폭이 0.4점으로 가장 컸다고 밝힘

〈2017년, 2018년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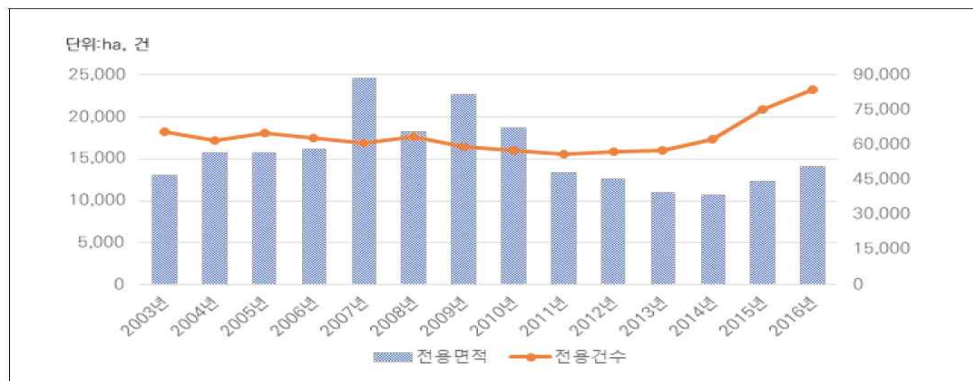
(평균 점수/ 11점 척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17	2018	2017	2018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6.7	6.4	6.3	6.1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6.5	6.3	6.2	5.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아울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16년에 발표한 '국내 농촌 경관관리 현황과 개선 방향'에 따르면 국내 농촌경관의 문제와 원인 중 농업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관 훼손 및 폐수나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12월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국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농지전용 면적은 줄어드는 반면 농지의 전용건수는 증가
 - 2016년 기준 약 83,000건의 개발행위가 허가되었으며, 주로 관리지역(81.6%)과 농림지역(16.85%)에 집중되고 있음. 이 때문에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연도별 농지전용면적 및 전용건수 변화(2003~2016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토의 용도 구분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음
- 특히 농촌에서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은 곳은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용도의 개발 가능성 편재함
- 이 때문에 관리지역을 '도시 관련 기준지역(가칭)'과 '농업 관련 기준지역(가칭)'으로 분류하여 명확히 구분해야 함

* 관리지역

- 정의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분류 :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을 위해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 편입 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6) 생산자 취약계층을 고려한 국가 푸드플랜계획 수립·시행

한농연 요구사항

-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향상을 고려한 국가단위 푸드플랜 계획 수립 및 법적 근거 신속히 마련
-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 프로세스 구축

제안 배경

- 감염병 확산·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이 때문에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등 관련 산업 및 정책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이 필요함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선정
 -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을 수립·시행 하겠다 하였으나 진행속도가 더뎠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국가단위 푸드플랜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경우 지역의 농산물 생산·공급 수요 등 특성을 고려해 수립·시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 운영 방식은 지역 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큰 틀에서 푸드플랜의 정책의 방향과 명확한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변질 될 수 있으며 사업 확산(지자체 참여)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음
- 이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국가단위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는 푸드플랜에 생산자의 중요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타 농업 정책·사업에 비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이 때문에 국가단위 푸드플랜은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역할과 책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먹거리 순환 과정에서 소외 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이 반드시 함께 고민되어야 함

7) 공익자원 훼손하는 농지·산지 태양광 사업의 전면 재검토

한농연 요구사항

○ 농지·산지 태양광 사업의 제도 보완 및 전면 재검토 필요

- 농지·산지 태양광 사업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 난개발, 경관훼손, 빛 반사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주민 피해, 경제성 등을 종합 점검하고 대책 마련
- 나아가 농촌 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헌법상 명시된 농지보전 의무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보전·계승 측면에서만은 전면 재검토

제안 배경

○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현재의 농촌 태양광 발전에 대한 농업 현장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농지보전은 뒷전, 제도적 완비 없이 막연한 개발 부촉이는 농지 태양광
 - 통계청의 2019년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약 158만 ha로 전년 (2018년)보다 1만 5000ha(0.9%)감소하였으며, 2010년 이후 9년 연속 “농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용도 변경 등 농지전용 면적은 크게 증가하였음
 - 농지 훼손 및 투기적 개발에 따른 난개발, 생산량 감소 및 작물 생육환경 변화,농가 진입 장벽 증가 및 경제성 확보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농지 보전의 의무를 배제하면서까지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공산이 큼
- 무분별한 난개발, 산림자원 훼손하는 산지 태양광
 - 윤영석 국회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9월 4일까지 집계된 태양광 피해 사례는 총 52건으로 산지태양광 20건, 농지태양광 12건, 기타 20건으로 나타났음
 - 2017년~2019년 기준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총 4,902ha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이며, 3개년 동안 약 233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었음
- 조선일보의 8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은 경사도(현행 15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광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제반 환경에 대한 사면 안전성 평가가 최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산지태양광 사업은 해당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공개되기도 하였음

- 태양광 패널 설치량 증가와 산사태 발생 빈도 간 상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무분별한 산림자원 훼손, ▲사면안전성 검토 절차 누락 의혹, ▲시설 판매 및 설치 업체의 부당 이익 등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태양광발전을 명분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관련 법령 개정은 지양해야함

- OECD 국가 중 곡물자급률이 최하위인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를 위한 농지 보전이 필수임에도 농지 지목 변경, 규제완화 등 태양광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법안 개정 및 제도적 지원이 확대 되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8) 포스트코로나, 기후변화 대비 농업분야 대응방안 정립·마련

국정감사 요구사항

- 포스트코로나,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농촌분야 핵심 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
 - 한국판뉴딜종합계획 농업분야 과제, 당면현안과 사회적 이슈 반영해 전면 재검토
- 포스트코로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중·장기적 대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축 및 관련 논의 현실화

제안 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코로나사태로 인한 환경 변화는 식량안보, 친환경농업의 확대, 농촌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농촌분야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
 - 통계청의 2019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성의 증가로 지난 10년간 과거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간 지역적 집중호우 증가, 장기적 가뭄 발생 등 최근 그 강도가 강화되고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관련 세계의 석학과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자국 우선주의, 지역화 등의 새로운 트렌드가 식량부족, 식량 가격 상승, 식량 공급의 사슬 혼란과 극심한 빈곤 등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음. 이미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는 쌀 국내비축 확대, 수출 물량 조절을 현실화 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식량안보와 자급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화 및 탈 도시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 또한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주 공간 및 생활권으로써의 농촌 활성화 측면에도 다양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에서의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인식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상당히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8일 발표한 「코로나19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변화」현안분석 자료의 주요한 지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변화〉

설문 내용	응답 결과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해졌다	67.6%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해졌다	69.5%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	74.9%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수요변화」자료의 통계표 인용재구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판뉴딜종합계획에 제시된 농업분야 과제는 이러한 핵심적 이슈와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의 못매를 맞고 있음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농업분야 과제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공감한 식량안보, 공익적 기능, 국가 중요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역할 등의 주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현장에 만연한 핵심 현안을 되짚어보고 이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함
 - ▲원활한 인력수급정책 ▲농산물 가격하락 및 재해증가에 대한 대책 ▲정주 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 체계적 정비 ▲농업 재해대책 및 정책보험 현실화 ▲식량자급률 향상 방안대책 ▲농업인력 육성 정책 등 포스트코로나시대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농정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9) 과수산업 유지·보호를 위한 과수화상병 방역대책 개선

한농연 요구사항

- 과수화상병 관련 방역당국 및 소관기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방역체계 구축
- 폐원 농가 생계 안정을 위해 손실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작물 발굴 및 지원(교육, 시설 등) 방안 마련

제안 배경

-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과수화상병(식물 세균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대한민국 과수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년 5개도 15개 시·군 619농가 328ha에서 발생(8.31. 기준)하였으며, 매년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토착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단위 : 호, ha)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20.8.31기준
농가	43	17	33	67	188	619
면적	42.9	15.1	22.7	48.2	131.5	32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반면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주변 농가로의 확산 저지를 위해 과목을 매몰하고 해당 과원을 폐원 처리 하는 것이 유일한 방제책임
 - 이런 상황에서 '20년부터 방제기준 등이 일부 변경돼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기존 한그루만 발병하도 과목 전체를 매몰하던 것에서 일부 기준이 변경되며, 대응이 늦어져 확산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과수화상병 주요 방제기준 변경 비교>

구분	기존	변경
방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과원 내 한그루라도 발생하면 과목 전체 매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발생한 지역에 한해 과원 내 발생주율 5% 미만일 경우 발생주만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식물방제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 판단될 시 즉시 폐원 조치 가능

- 또한, 구제역·조류독감 등 주요 동물감염병 발생 시 방역당국과 지자체 지도 및 감독 하에 살처분·매몰이 이뤄지나 과수화상병의 경우 국가검역병 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긴급방제 명령을 내리면 농장주 주도하에 굴취·매몰이 이루어짐으로 자칫 방제에 허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폐원 농가는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 사업 지침'에 따라 매몰 후 3년 동안 재식을 할 수 없음
 - 품목 간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과수 유목이 처음 결실을 보기까지 대략 3년 정도 소요되며,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한 성과기는 5~7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동안 정상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지 특성상 휴경·방치 시 관리·복구가 어려워 농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며, 재식 금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발 우려에 화상병 기주식물(사과, 배, 모과 등)은 식재하기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대체작물이 특정 품목에 쏠릴 경우 타 작물의 가격하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체작물 발굴과 안배, 그에 따른 지원(교육·시설 등)이 신속히 이뤄줘야 함
- 따라서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방역당국 및 소관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신속한 방제를 위해 과수화상병 발생 시 기존과 같이 과목을 전량 매몰하고, 폐원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손실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함

10)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정비·강화 및 예산 증대

국정감사 요구사항

-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300평 이상) 신청한 농가가 과거 2017~2019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 공익직불금 예산 단계적 3조까지 상향 마련
 - 현재 2조 4천억으로 계획된 공익직불제 예산을 2017~2019 미신청 농가 구제 및 추가 가산형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필요

제안 배경

- 2019년 12월 농업소득법이 본회의 통과 이후 지역별 직불금 현장 접수 결과 다양한 민원 발생
 - 금액이 적어서 직전 3년간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던 농지와 농가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적은 규모의 농지는 서류 신청이 번거로워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아 '해당 없음', 지난해와 올해 농업에 진입한 신규 농가는 신청 제외
 - 농촌과 가까운 도시에 살지만 농사를 꾸준히 지어온 '출퇴근 도시농민'들은 소농직불금에서 제외
 - 지난해와 올해 농업에 진입한 신규농가는 신청 제외 농지의 연도를 한정하다보니 신규로 개발된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도 제외되는 문제 발생
 - 임대 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의 어려워 실제 영농 활동에 종사해도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 함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공익직불금의 재정규모를 2024년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익직불금 예산확대 차질 발생
 - 농지 요건 등 강화된 규정에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된 농가 구제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는 대상의 기준이 불분명해 직불제 예산에 맞춰 대상을 제한하였지만 향후 개선이 필요함
 - 현재의 공익직불제 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가산형 공익직불제 확장이 매우 중요하며 예산 확보 필요